

국가비상사태 시행령(NO.5/2021)

국가 존립 및 주권에 대한 위협 대응을 위한 국가비상사태 시행령

(※ 주요 내용 번역)

대내외 적들로부터 국가의 존립과 주권을 수호하는 것이 정부의 법적 의무 및 도덕적 책임인바,

테러리스트 TPLF와 그 연합세력이 국가의 존립 및 주권에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는바,

테러리스트 TPLF와 그 연합세력이 에티오피아 일부 지역에서 민간인에 대해 저지르고 있는 사살, 약탈 및 여타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공격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민간인 가운데 거주하며 TPLF와 그 연합세력의 첩보원으로 활동하면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함을 인지하며,

테러리스트 TPLF가 에티오피아를 약화시키고 파괴하려는 열망을 가진 외국세력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상기 언급한, 평시의 법집행 메커니즘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국가의 존립에 대한 임박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 선포 및 시행이 필요해진바,

그러므로 이제,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헌법 제93조(1)항 (a)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선포함.

(※ 제1부 용어 정의, 적용범위 등 일반사항 생략)

제2부

긴급조치 및 금지되는 행위

4. 국가비상사태 조치

국가비상사태작전사령부가 국가의 존립과 주권을 보호하고 민간인의 안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1) 국내 어느 지역이든 평화·안보 유지를 위해 군대 또는 여타 보안군을 배치하도록 명령
- 2) 군복무 적령기인 국민과 총기 소지자에게 군사훈련을 받거나, 군사임무 명령을 따르거나, 혹은 그렇게 할 수 없을 경우 무기를 인도하도록 명령
- 3) 통행금지 시행
- 4) 모든 통신 및 대중교통 수단을 폐쇄하거나 중단
- 5) 테러단체와 협력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경우, 법원 영장 없이 체포하고, 동 시행령 시행기간동안 그러한 사람을 구금하거나 법률에 따라 동일한 책임을 추궁
- 6) 테러단체와 협력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어떤 사람이든 가택, 체류지 및 차량을 수색하고, 검색 및 신원 확인을 위해 정지시키고, 총기를 압수
- 7) 일정 기간 동안 특정 도로 차단 또는 서비스 제공 기관의 폐쇄 명령, 또는 특정 장소에 머물도록 명령 또는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장소에 출입하거나 대피하는 것을 금지
- 8) 국가의 심각한 안보 위협과 문제가 있는 지역의 경우, 지방 행정 기능의 일부 또는 전체를 중지하거나, 행정 관리급들을 민간 또는 군사 관리자로 변경 또는 교체
- 9) 테러단체에 직·간접적,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민사회 단체의 면허정지 또는 영구 취소를 관련 규제 당국에 명령
- 10) 테러단체에 직·간접적,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언론이나 언론인의 면허정지 또는 영구 취소를 관련 규제 당국에 명령

6. 의무 및 금지 행위

- 1) 모든 사람은 동 시행령에 따라 구성된 국가비상사태작전사령부의 지시 및 명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 2) 국가비상사태작전사령부의 활동 및 동 시행령 취지에 반하는 행위, 테러단체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거나 테러단체의 활동을 장려하는 행위, 민간인을 위협하는 모든 표현이 금지됨.
- 3) 테러단체에 금전적, 정보, 물질적, 정신적 등 모든 형태의 직·간접적인 지원 제공이 금지됨.
- 4) 국가비상사태작전사령부 또는 이외의 권한 위임자의 허가 없는 시위 또는 공개 집회 개최가 금지됨.
- 5) 에티오피아 연방군 및 연방경찰 또는 여타 관련 치안기관의 허가 없는 총기류를 소지하고 이동하는 행위가 금지됨.

- 6) 신분증, 운전면허증, 사원증, 여권 또는 유사한 형태의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도시를 이동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신분증 미소지자는 국가비상사태작전사령부 지침에 따라 인근 Kebele 및 Woreda 치안행정사무소 또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2주 내에 임시 신분증 발급받아야 함.
- 7) 필수 서비스 및 생산 분야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또는 경제활동 저해행위는 금지됨.
- 8) 동 시행령 하 불법적 이익을 얻기 위한 권력 남용, 합리적인 의심 없이 개인을 구금하는 행위 또는 이와 같은 권력남용 행위 가담이 금지됨.

(※ 제3부 국가비상사태작전사령부 운영사항 생략)

제4부

기타 조항

8. 효력 정지 법률

- 1) 사법기관은 동 시행령이 만료될 때까지 동 시행령에 시행에 관한 권한을 가지지 않음.
- 2) 동 시행령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명시된 외교특권을 침해하지 않으나, 동 시행령과 상반되는 실체법·절차법은 시행령 발효 기간 동안 중단됨.

9. 형사책임

- 1) 동 시행령의 규정 또는 그에 따라 발표된 지침을 위반한 자에게는 최대 3년의 단순 금고 또는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최대 10년 엄격한 징역형이 선고됨.
- 2) 상기 1항에 규정된 위반행위가 다른 법률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수반될 경우, 동 처벌도 적용됨.
- 3) 국가비상사태 기간에 발생한 동 시행령 및 그에 따라 발표된 지침에 대한 위반행위는 국가비상사태 종료 이후라도 평시 형사소송법에 의해 형사책임이 수반됨.

10. 지침 발표 권한

- 1) 국가비상사태작전사령부는 동 시행령의 시행을 위해 지침 발표 권한이 있음.
- 2) 상기 1항에 따라 지침 시행 전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매체를 통해 공표해야함.

11. 발효일

- 1) 동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각료회의 공포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함.

2) 의회(하원)는 6개월 기간 만료 전에 국가비상사태 종료일을 결정할 수 있음. 끝.